

2026.2.2.(월)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3631 / Fax 02-6788-3635
차도순 국장(을지원국) /김영균 비서관(염태영 의원실) 02-784-3807

행정안전부는 돈의문박물관마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혁신파크를 비롯해 강남구청의 ‘양치승 관장 사건’에 대해 즉각 감시에 착수하라!

2026년 2월 2일 (월) 09: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사안별 피해자 대책위는 오늘(2월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돈의문 박물관 마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혁신파크, 강남구 민자 주차장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시설 임대·관리 부당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박홍근, 염태영, 박희승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김태형 강남갑 지역위원장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도 함께하였으며, 염태영 국회의원이 사회자로 나서 서울시청과 강남구청의 공공시설 임대·관리 행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박홍근 의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책을 위해 시민이 존재하는 본말전도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오세훈 서울시정의 행정으로 인해 벌어졌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격했다. 이어 박희승 의원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사안이며, 서울시와 강남구는 모든 갑질을 즉각 중단하고 행정안전부는 관리 감독에 즉각 나서라”고 강하게 말했다. 강남갑 김태형 지역위원장은 “강남구에서 발생한 일명 ‘양치승 관장’ 사건에 대해 강남구청이 방조하고, 끝내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든 참담한 행정 폭력”이라고 강남구청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강남구청의 ‘양치승 관장 사건’, 서울시의 돈의문 박물관 마을·DDP A3 알림터·서울혁신파크 전면 퇴거는 모두 공공을 명분으로 시민을 불러들인 뒤, 정책이 바뀌자 아무런 협의나 보상 없이 내쫓은 구조적 행정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 김은주 피해자의 경우, “서울시 요청으로 시작된 공익 기반 운영을 통해 하루 평균 8천 명이 찾는 시민 문화 공간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운영 성과와 무관하게 절차 없는 전면 퇴거를 통보했다.” DDP A3 알림터 카페 드 페소니아 김이경 피해자 역시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민간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시설을 개선하고 공공 화장실까지 설치했으나, 약속된 비용 정산과 재계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민사소송과 매출 압류라는 과잉 행정이 뒤따랐

다.” 라고 말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서울혁신파크 관련 서대문 은평시민연대 윤민정 활동가 또한, “서울시가 직접 ‘혁신과 실험의 공간’ 이라며 입주를 유도했음에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사전 협의나 대안 없이 전면 퇴거가 통보되면서 수년간 축적된 시민사회와 지역 공동체의 성과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 라며 오세훈 시장을 대놓고 비판했다.

강남구청의 민자 주차장 전세사기 피해 사례, 이른바 ‘양치승 관장 사건’ 은 더욱 심각하다. 양치승 피해자는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임에도 그 사실이 고지되지 않은 채 고액 보증금을 받은 민간 사업자의 책임은 외면한, 강남구청은 피해자들을 무단 점유로 형사고소하고 변상금을 부과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해당 사안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모경중, 위성곤 국회의원 이 강남구청 및 서울시의 공공시설 임대관리 부실과 행정권 남용 문제 등을 제기했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시장도 심각성을 인정한 사안이기도 하다.

또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서울시청과 강남구청은 형사고소, 변상금 부과, 강제집행, 매출 압류 등 모든 적대적 행정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강남구청은 논현 1·2 주차장 임대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공식 조사에 착수하라.

넷째,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청과 강남구청의 공공시설 임대·관리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라.” 라고 호소하였고, 안진걸 소장은 “오늘의 침묵은 내일 또 다른 양치승 사건, 또 다른 돈의 문·DDP·혁신파크 사건을 낳을 뿐” 이라며,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박홍근 의원에게 입법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26. 02. 02. [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기자회견문]

행정안전부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혁신파크를 비롯해 강남구청의 ‘양치승 관장 사건’ 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공을 명분으로 시민을 불러들이고, 정책이 바뀌었다며 절차 없이 내쫓는 서울시 행정의 구조적 폭력을 고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울시의 돈의문 박물관 마을, 동대문 DDP A3 카페 드 페소니아, 그리고 서울혁신파크 전면 퇴거 사건, 강남구청의 양치승 관장 사건 이 네 사건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벌어졌지만 놀랍도록 비슷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시민들은 서울시나 자치구를 믿었고 안내에 따라 적법하게 입주했습니다. 돈의문은 하루 8천 명이 찾는 시민 공간이 되었고, 페소니아는 DDP와 임대료에서 감면해 주겠다는 계약에 따라 1억 5천을 들여 공공 화장실까지 만들었습니다. 혁신파크는 지역 공동체 거점이 되었고, 양치승 관장 역시 합법적으로 공공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계약 연장 가능, 시정사항 이행시 갱신, 화장실 비용 정산 약속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고,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의 정책이 바뀌자, 절차 없는 퇴거 통보, 민사소송, 카드 매출 압류 같은 과잉 집행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들이지만 서울시청과 강남구청장의 갑질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DDP - 카페 드 페소니아 피해자 김이경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이름으로 자행된 부당한 행정 폭력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시가 4년간 방치하던 동대문 DDP 시민 통행로 공간에 약 10억 원을 투자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서울시 요청에 따라, 공공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서울시는 갑자기 기존 운영 방식이 문제라며 공유재산으로 전환했고, 같은 조건의 다른 매장들은 모두 공개입찰을 통해 10년 계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제 매장, 페소니아만 입찰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서울시는 “시장 결재가 났다” 라는 말한마디로 저에게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같은 계약, 같은 조건, 같은 공간에서 왜 저만 불법이 되었습니까? 6년 중 정상적으로 영업한 기간은 고작 1년 반입니다. 그 사이 코로나, 간판 금지, 그리고 끝없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열 건이 넘는 소송을 감당하며 카드매출 압류, 통장 압류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말합니다. “페소니아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 라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잘되면 빼앗아도 되는 겁니까? 성공하면 내쫓고, 버티면 압류하는 것이 공공행정입니까? 서울시는 지금 공공의 이름으로 약자를 짓밟고 있습니다. 법이 아닌 힘으로, 행정이 아닌 폭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법대로,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께 요구합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시민을 몰아내는 행정을 중단하십시오.

두 번째 사건은 돈의문 박물관 마을입니다.

저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에서 ‘학교앞분식’ 을 운영해 온 시민 김은주입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하던 2021년 6월, 서울시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사람이 거의 없는, 말 그대로 유령도시였습니다. 이후 ‘서울 3대 떡볶이’ 로 불리던 ‘철길떡볶이’, 그리고 ‘미숫가루 맛집’ 으로 알려지면서 하루 8천 명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보물찾기, 달고나 뽑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같은 추억의 놀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마을 곳곳에 레트로 벽화를 그리고 꽃과 조경도 직접 가꾸었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표창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계약 당시 “사회적기업으로서 사업계획이 동일하면 갱신이 가능하다.” 라는 공식 메일을 보내왔고, 저는 그 말을 믿고 투자하며 운영해 왔습니다. 퇴거 직전까지도 시설 점검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27일, 서울시는 처분서도 아닌 단순 ‘안내문’ 한 장으로 “한 달 안에 나가라” 고 통보했습니다. 민간에서도 최소 3개월 전 예고와 10년의 계약 기간은 보장합니다. 그런데 공공이, 그것도 서울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 있습니까? 항의하자 서울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유재산은 민간 계약이 아니라 행정 계약이기 때문에 10년을 채울 필요가 없다.” 이 논리가 용인된다면, 오늘은 제가 피해자지만 내일은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이란 이름 아래, 시민은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정책을 핑계로 시민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이유를 공개하고, 정당한 절차로 해결하십시오. 도시의 미래를 말하면서 시민을 내쫓는 행정,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서울혁신파크 전면 퇴거 사건입니다.

저는 서대문 은평시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 윤민정입니다. 서울혁신파크는 서울시가 ‘지역혁신’ 과 ‘주민참여’ 를 목표로 조성한 공공 거점이었습니다. 200여 개 시민단체와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입주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간을 가꾸고, 주민과 연결되며 협치가 실제로 작동하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책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공간을 매각하겠다고 입주자 전원에게 ‘일괄 퇴거’ 를 통보했습니다.

대체 공간도, 단계적 이전도, 최소한의 협의나 대안도 없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버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압박이자 강요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가 매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사람만 내보내고 공간은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은 사라지고,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본래 행정절차로 풀어야 할 문제를 민사 ‘명도소송’ 으로 우회했고, 강제집행과 형사고발, 과도한 변상금 부과로 입주 단체들을 몰아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공공성의 파트너’가 아니라 ‘정책이 바뀌면 언제든 버려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공공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쫓는 속도가 아니라, 설명과 협의, 그리고 전환 대안으로 책임을 보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공공의 이름으로 저지른 이 행정 폭력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강남구 민자 주차장 전세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저는 강남구 민자 주차장 전세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양치승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범죄자도 아닙니다. 그저 공무원의 말을 믿고 장사를 시작한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저희는 2019년, 강남구청 소유의 기부채납 건물인 논현 1·2호 주차장에 입주했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개발업자에게 관리권을 줬으니 계약해도 문제없다.” 라고 했습니다. 개발업자는 “10년, 20년 장사해도 된다.” 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희가 입주할 당시, 해당 건물의 기부채납 기간은 이미 4년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기간이 끝난 뒤, 불과 3개월이 지나서야 “이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공무원과 개발업자의 말을 믿고 6개월 치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개발업자가 구청에 납부해야 할 비용을 내지 않자, 구청은 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했습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료는 이중으로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개발업자는 형사고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부채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라는 담당 공무원의 진술 하나로 개발업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모든 임차인들이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건물 관리 부실로 누수가 발생해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도 구청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사표를 쓰고 떠났고, 개발업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챙긴 채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줄 돈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남은 것은 빚과 상처, 그리고 무너진 삶뿐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행정을 믿은 죄가 이렇게 큰 죄입니까?

저희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긴 삶을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과한 요구입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서울시청과 강남구청은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변상금 부과, 강제집행, 매출 압류 등 모든 적대적 행정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2차

가해를 당장 중단하라.

둘째,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돈의문, DDP, 혁신파크, 민간주차장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실질적 피해회복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셋째, 강남구청은 논현1,2주차장과 임대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공식 조사에 착수하라.

넷째,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청과 강남구청의 공공시설 임대·관리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오늘의 침묵은 내일 또 다른 양치승 사건, 돈의문 사건, DDP 사건, 서울혁신파크 사건을 낳을 뿐이다. 서울시청과 강남구청은 지금 당장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로 응답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6년 2월 2일

강남구 민자 주차장 전세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공유재산피해 소상공인비상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첨부사진]

